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음 2월 12일) 제20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준공 인가

익산국토청 "지역발전 상승효과 거둘 듯"

용지 53만2000㎡ 분양 · 12개 업체 입주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조성한 산업단지가 준공했다.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LH가 요청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인가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동북아 식품시장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2014년 3월부터 왕궁면 일대에 2298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산업단지에는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센터, 식품품질 안전센터, 식품패키징 센터, 파일럿 플랜트, 임대형 공장 등 6개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해 업무를 돕고 있다.

산업단지는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와 KTX 익산역에서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인근에 완주산단, 전주첨단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산업벨트 구축도 용이하다.

현재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53만2000㎡가 분양, 국내외 56개 업체가 계약하고 12개 업체가 입주했다.

익산국토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등과 연계해 전북 발전에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도, 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경기도 김포 돼지농가서 발병

전북도가 구제역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함에 따라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도는 구제역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차단 방역을 강화하며, 구제역 백신접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제류 농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및 외부인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의심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2월 정읍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김진성 기자

檢, 오늘도 MB 옥중 조사 설득

검찰이 28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내일 다시 부장검사 등이 직접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사에게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해당 변호인도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을 모두 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 설득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경우 곧바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를 갖은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송하진 도지사, 전북지역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국가발전 틀, 수도권중심 남북축보다 지역중심 동서축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회 토론회

"수도권 과밀화 · 지방 소멸 위기 극복위해 절실" 한목소리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등 지방정부의 구체적 요구 늘어

송 지사 "동서축 전환 필요 사항, 균형발전 성공에 힘쓸 것"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발전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발전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체회의와 토론회를 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책을 수도권 중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에서 벗어나 동서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맞춰 이뤄진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동서축으로의 전환을 대통령과 정부에 정식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 이춘석 의원, 김종민 의원, 강창일 의원 등 협의체 회원 뿐만 아니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축하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의 위기상황,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의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기조발제와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구축 전략' 주제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기업본사의 57%가 위치하는 국가의 불균형 현상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 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가속화되고 지역은 지역산업의 위기와 교육 · 의료 · 문화 등 삶의 질의 저하,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같은 국가적인 불균형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로 · 철도 등 SOC만 살펴봐도 그간 각 지역과 수도권과 연결된 교통체계는 잘 이루어져 있으나, 지역간의 동서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지방정부에서는 동서축 중심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황영철 의원은 "전 국토의 12%인 수도권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불균형적 상황에서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살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서축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협의체에서도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